

# “서해안 철도망 구축, 지역균형발전 촉구”

〈군산·목포〉

호남 서해안권(영광·함평·고창·부안·군산) 5개 지자체장이 서해안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고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장세일 영광군수를 비롯해 심덕섭 고창군수, 권이현 부안군수,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 임만규 함평군 부군수가 참석했다.

5개 지자체장은 서해안 철도 인프라 관련 호남 서해안권이 경기 충청지역에 비해 일방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지난 2일 서해선(홍성-서화성), 장항선(신창-홍성), 평택선(안중-오성) 3개 노선이 동시 개통하면서 경기 충남지역 철도망 구축의 신기원이 열렸다. 동해안 역시 올 연말 포항-삼척 간 철도가 개통될 예정이다.

반면, 전남과 전북 서해안은 국책 사업인 새만금을 비롯해 조선업과 원자



영광군을 포함한 호남 서해안권 5개 지자체장이 지난 22일 고창군청 대회의실에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군산·목포선 서해안 철도망 구축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 영광 등 전남·북 5개 지자체, 국가계획 반영 요구 연말까지 협의회·범군민 서명운동 등 촉구 활동

력, 해상풍력, 전기차, 드론 등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산업의 중추임에 돌 철도망 구축은 수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5개 지자체장은 결의문을 통해 “서해

안 철도는 물류비용을 줄여 국가 첨단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포화상태에 이른 서해안고속도로 통행량을 분산시켜 탄소배출 저감과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폭발하는 관광 수요 대응 차원에서 철도망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호남 서해안권에는 현재 운영 중인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향후 5년 내 들어설 새만금 국제공항, 3개의 국제여객 터미널(군산항, 새만금항, 목포항), 크루즈터미널(부안 격포)이 본격 운영 될 예정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을 내륙까지 실어나르기 위해서는 철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영광군 등 5개 지자체는 기자회견 이후 올 연말까지 협의회 구성과 범군민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부장관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내년에는 호남정치권 대상 공동 촉구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내년 하반기에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

6-2035)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서해안 철도 건설은 호남 서해안권역의 국토 균형발전, 환경해권 시대의 경제 및 관광산업 기반 마련,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호남 서해안권의 희망찬 미래로 전남·북도와 여러 지자체 등과 함께 서해안 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 기자

# 강진원 강진군수 “생활인구 확대·경제활성화 최우선”

생활인구 획기적 증가 원년 선포·군정 방향 제시 농업·관광 정책·정주여건 개선...‘5국’ 조직개편

강진군이 2025년을 ‘생활인구 획기적 증가 원년’으로 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정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 군정방향과 비전을 밝혔다.

강 군수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 감소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6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가 반영됨에 따라 2025년을 ‘생활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원년’

으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강 군수는 “축제와 관광산업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경제 활력이 정주인구와 생활인구의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성과를 거둔 ‘강진 반값여행’은 내년에도 ‘누구나 반값여행’으로 이어지며, 소비 금액의 5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농업 중심 정책도 강화된다. 내년도 농업 예산 비중은 올해 24%에서 28%로, 약 200억원 증액되며 논농 700ha, 서리대 150ha로 재배 면적 확대, 농기계



지원, 해의 수출, 공공형 근로자 확대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주거와 복지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빈집 리모

델링 사업으로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고, 육아수당 정책과 청년 주거비 지원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강진군은 올해 국·도비 2천456억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이를 동력 삼아 더북코리아와 협력해 강진 음식타운을 조성, 맛의 도시로 이미지를 강화하며 외식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계획이다.

또한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5국’ 체제로 조직을 개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한다.

강진원 군수는 “인구가 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군민이 잘 살며, 행복한 강진을 만드는 것이 공동 목표”라며 “군민, 의회, 공직자가 소통하고, 우수 자원과 휴먼 파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결해 새로운 강진을 창조하자”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 목포시의회 “화장장 직영 전환 전제해야 처리”

박홍률 시장 ‘화장장 중단’ 규탄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목포추모공원(화장장) 민간 운영 위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의회가 목포시의 직영 전환을 전제로 민간 위탁 동의안을 다시 상정한다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등 12명의 시

원들이 박홍률 목포시장의 목포시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목포시의원들은 “목포시의 화장장 운영이 목포시 집행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졸속행정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며 “박 시장은 화장장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통해 시민의 우려를 키위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규탄했다.

의원들은 “현재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에 재위탁을 맡기는 것은 민주당 12명의 시의원 모두 원치 않는다”며 “박 시장의 강성행정은 시민의 생명존엄권을 불모로 눈 앞에 닥친 상황을 책임회피하려는 치졸한 행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준비기간을 주고 직영으로 전환하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수정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집행부에서는 3년의 위탁기간만을 고수했다”며

“직영 전환을 전제로 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상정한다면 즉시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서라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입장문에 참여한 목포시의원은 조성오·이동수·박용식·김관호·이영환·최환석·정재훈·박효상·고경욱·최원석·최지선·유창훈 의원이다.

한편,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내년 1월 발생될지도 모를 ‘장례대란’만은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해 향후 적극적인 합의점 도출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 “한국·일본 고구마 고향 뭉쳤다”

해남·가고시마 NPO고구마월드센터 협력 구축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고구마 고향이 뭉쳤다.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일본 가고시마 NPO고구마월드센터 및 동아시아 고구마 친선협회의 업무협약을 맺고, 고구마 산업발전에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

가고시마현 NPO고구마월드센터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NPO고구마월드센터 이사장 겸 동아시아 고구마 친선협회 고우하라 시게키 회장을 비롯한 이상욱 해남

군의회 의장과 민찬혁 군의원,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고구마 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 교류와 정보 교류에 적극 지원·협력하기로 하고, 우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고구마 재배와 가공 판매를 비롯해 고구마 산업의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상호 정보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고구마를 활용한 융복합산업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품질 차별화와 다양한 가공 성공 사



례를 반영해 고구마 융복합산업 활성화로 해남고구마가 전국 최고를 넘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고우하라 이사장은 “해남고구마는 지난 10여년 동안 눈부시게 성장해 많은 발전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디지털과 같은 가공 분야, 특히 냉동 가공이 이제 막 첫 발을 댄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기계설비 등 가공산업 발전을 돕고 싶다”고 화답했다.

일본 규슈 남부에 위치한 가고시마현은 고구마의 고향이라 불릴 정도로 일본의 대표적인 고구마 주산지다. 특히 고구마 술을 비롯한 100여종의 고구마 가공 식품을 개발하고, 체험과 관광을 포함한 6차산업으로까지 연계해 전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해남=박필용 기자

# ‘영암 데이터 보좌관’ 과학행정 이끈다

공공데이터 그래프·지도 시각화 시스템 구축 완료

영암군은 “최근 군청에서 ‘데이터 보좌관 구축사업’을 마치고,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영암군 데이터 보좌관’은 지역의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플랫폼에 모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그래프·그림 등 시각화한 정보로 대시보드 화면에 구현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첨단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공모사업’에 선정돼 5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5~11월 진행됐다.

군청홍보실에 설치된 영암군 데이터 보좌관은 공공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그래프·지도 등으로 송출해 누구나 지역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

게 되고 있다. 데이터 보좌관이 보유한 데이터 융합 기술은 영암의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한 주제별 분석 결과도 제공할 수 있어 과학행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데이터 보좌관을 군정에 활용하는 동시에 데이터 융합 기술로 ▲영암형 ESG지표 ▲인구소멸지수 ▲청소년 청년 정주여건 ▲영암군 기업 5개 주제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정책 수립 기초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어 최종 점검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영암군홈페이지에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보좌관 대시보드도 개발 예정이다. /영암=나동호 기자

# 신안 도초도 수국정원 경유 버스노선 신설

대지 미술관 관광객 교통 편의 제공

신안군은 24일 “도초도 대지의 문화 시설(숨결의 지구) 개관에 맞춰 관광객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대지 미술관(지구의 숨결)이 위치한 도초도 수국정원을 경유하는 공영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지난 22일부터 대중

교통(공영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여객선이 도착하는 비금 기산선착장에서 도초도 수국정원을 경유해 도초면까지 가는 간선버스는 1일 5회(출발시간 오전 9시40분, 오후 1시10분·2시40분·3시40분·4시40분), 도초 화도선착장에서 수국정원까지 가는 지선 버스는 1일 4회(출발시간 오전 9시·11시30분, 오후 1시40분·3시) 운행한다. /신안=양홍기 기자

# 무안군의회, 제298회 2차 정례회 개최

가축사육 제한 개정·내년도 예산 등 심사

무안군의회는 24일 “지난 18일부터 12월12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임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주요 일정은 19일부터 20일까지 군정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27일-12월3일)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12월4-6일)를 운영한다.

이어 12월9일부터 11일까지는 군정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12월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원중 의원은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방안’을, 임동현 의원은 ‘자치법률 활성화를 위한 조례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지막으로 임은택 의원은 ‘농가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농가 소득 보전 방안’에 대해 제언해 주요 군정 현안을 공론화했다.

이효성 무안군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과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세심한 예산 심의와 철저한 군정 현안 점검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무안=김상호 기자